돌봄[1)]을 걱정하다

박형철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북지역본부
보건관리팀 원장·예방의학전문의

"00군 보건소는 등록 관리받던 두 분을 전출시켰다. 치매 진료 지원금을 지급하던 분들인데, 자식들이 어르신 혼자 고향에 남겨두고 간병·돌봄할 수 없으니, 부득이 자신들의 생활 근거지인 수도권으로 모시고 갔다. 이런 경우 자녀가 맞벌이로 바쁜 일상에서 제대로 돌봄 제공이 어렵거니와 어르신으로선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어려워 치매가 더 빨리 악화할 소지가 클 것이다. 그러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띄엄띄엄 찾아오는 자식들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지인이 전한 다른 사례도 있다.

"그에겐 모친이 계신다. 90 줄이 넘어 전에 비해 인지기능이나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되었다. 갈수록 건강이 악화해 그의 가족은 멀지 않아 '요양시설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여부로 논쟁 중이다. 한쪽은 당장 입원하자, 주장하고 다른 쪽은 아직 총기가 있으신데 스스로 입원하시려 하겠는가 하는 온건파가 있다. 중립을 견지하는 가족도 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후자가 힘을 얻다가 깜박깜박하시는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에서 강경론을 주창하곤 한다. 과거에 비해 외출 횟수가 많이 줄었으나 가끔 동네 외출하다가 파출소 경관의 엄중한 호위(?) 속에 귀가하는 경우는 다시 강경론이 고개를 든다. 그나마 아직은 사소한 문제를 제치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돌봄의 문제는 상당 기간 그의 가족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가족들의 뇌리에는 걱정과 부담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돌봄 이슈

돌봄이 화두이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돌봄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나이가 들면 인지기능은 물론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된다.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되어 누군가의 도움받지 않으면 안 된다. 돌봄은 먼저 배우자가 거론된다. 배우자가 살아 있고 건강하여야 가능하다. 자녀들도 고려된다. 여기에 조건이 따른다. 배우자, 자녀가 사회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시

1) 김용익, 그림 기므지우, <김용익의 돌봄이야기>,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24 참조 인용. 내용이 짧고 삽화가 곁들여져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간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가족이 직접 돌본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이 문제다[2].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처럼 오래 지속되면 가족들의 심리적·신체적 상태가 피폐해진다. 그만큼 사회적 활동이 방해받기에 경제적 어려움에 도달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유치원이 '노치원'으로 바뀌고 있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시설 등이 늘고 있다. 가족 내 돌봄이 불가하면 요양시설 입소가 고려되지만, 노인 등 돌봄 대상자들은 '사는 곳에서 나이 들기'를 선호한다. 그러려면 노인 생활에 적합하도록 주택 개량이 필요하다.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탈시설화' 못지않게 가족 부담을 더는 '탈가족화' 또한 중요하다. 재가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시도됐지만, 실제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어 돌봄 인력이 가정 방문하는 등의 서비스가 일정 정도 가능하다. 완화의료나 호스피스와 같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존엄한 죽음을 위해 필요하다. 통증관리 등 의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와 간호사가 동행해야 한다.

장애인 돌봄도 문제이다. 노인 장애인은 젊어서부터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고령 장애인 또한 가족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범주의 지역사회 돌봄이 매

2) 김영범,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은 누가 돌보는가: 노인 돌봄 제공자 분석>, 현상과 인식, 2023

우 중요하다. 아쉽게도 현재는 정부 정책이 일반 노인에 초점이 맞춰져 노령 장애인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돌봄경제의 산업화

고령화는 위기이자 기회로서 돌봄이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급노동 가치를 환산하는 돌봄의 사회화를 '돌봄경제'라 하는데, 생산과 이에 파생된 돌봄 관련 물자와 정보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최근 노인 그룹에 진입한 386세대는 기존 노인과 차이가 있다. 1960~70년대생으로 노인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민주화 세대로 정치적 훈련이 되어 있다. 산업화 이후 세대로 구매력 또한 지니는 점도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봄을 확대하면 의사, 간호사는 물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방문이 증가한다. 돌봄이 정부나 사회경제적 부담이지만 잘 활용하면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왕진 등 가정방문이 늘어나고 이때 '원격의료(tele-medicine)'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이 산업 발전을 파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1)]

보편적 돌봄의 의미와 미래

어느 나라나 돌봄에 대해 심각하고 다면적 위기 상황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 않는다. 적잖은 연구나 시도가 있었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술모임 단체를 결성하기도 한다. 런던의 학술모임 단체인 'The Care Collective'가 그 예이다. 이들의 펴낸 저서 <돌봄 선언>[3)]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 "돌봄의 위기는 과거부터 있었으나 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폄훼한다. 저임금이나 여성 무임금, 낮은 생산적 지위를 부여하며 '비생산적'이라 평가 절하한다. 신자유주의[4)]가 도입되면서 더 악화됐다며 진단한다. 시장논리로 긴축정책을 펴면 팬데믹 등 재난의 상황에서 돌봄은 더 악화한다. 이러한 대안으로 보편적 돌봄을 주장한다. 공동체가 책임짐을 의미한다. 직접적 돌봄 노동뿐 아니라 타인들과 지구의 번영을 관여, 염려하며 공동으로 책임짐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돌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사회운동단체가 설립되었다. 바로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5)]로, 돌봄 불안 없는 사회 즉 '전국민돌봄보장'을 지향한다. 법이나 제도화를 목표하며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 나간다. 저출산과 양극화 대응의 핵심으로 소외와 불평등 억제, 방문, 주·야간 보호시설, 노인주택의 확충을 포함 복지국가 플랫폼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고령친화산업 등의 활성화 통해 투자와 회수 가능한 경제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돌봄 보장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주력

문재인 정부 이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국민의 료비 부담이 경감되었다. 반면 사회적 공동체는

3) 더 케어 컬렉티브 저, 정소영 역,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키케북스, 2021

4) 시장의 자연성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경제이론으로 1980년대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예이다. 비효율적 국영기업의 민영화, 복지예산의 축소, 노동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표방한다. 현대 사회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비판받고 있다(출처 : 다음백과). 수익창출의 원리로 돌봄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 공공자원 축소하고 공동의 책임이나 공동체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보편적 돌봄을 배척한다.

5)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www.dolbom-mirae.kr)

해체되고 사회가 분화되어 돌봄 기제가 약화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특정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래전 돌봄은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했지만, 오늘날 냉정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각 가정에 한두 가지 이상의 돌봄 문제가 있다. 노인, 장애인뿐 아니라 보육, 환자 병구완 등 병간호가 걱정이다.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도 형태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돌봄이 적잖은 부담일 수 있다.

돌봄의 시작은 있지만 현재로선 끝이 보이지 않는다. 보편적 과제로서 짓눌리는 부담을 극복하고 전국민돌봄보장을 실현하려면 의료시장에만 맡겨 둬서는 안 된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중요한 자원이지만 비혼이 증가하고 자녀 수 감소하는 현실에서 획기적 돌봄 부담경감 방안이 긴요하다. 매우 낮은 공적 복지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과 민간 또는 보건복지 전문가들과의 협력은 물론 막대한 비용부담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기전 발굴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와 지혜가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돌봄 보장제도 기반 구축에 매진해야겠다. 이제는 모두가 돌봄을 걱정해야 한다.